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 185 회

제 3 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1. 시정질문의 건
 - 가. 권형례 의원
 - 나. 양승근 의원
 - 다. 오정섭 의원
 - 라. 이정희 의원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오영세 의원)..... 2면
- 1. 시정질문의 건..... 4면
 - 가. 권형례 의원(일괄질문)..... 5면
 - 나. 양승근 의원(일괄질문)..... 11면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17면
- 보충질문(양승근 의원) 및 답변..... 30면
 - 다. 오정섭 의원(일문일답)..... 33면
 - 라. 이정희 의원(일괄질문)..... 50면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56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심준홍, 곽영교) 및 보임(전병배, 박희진)의 건..... 61면
- 3. 휴회의 건..... 62면

(10시 10분 개의)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의회와 시정에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석에는 양승근 의원님의 지역구 주민 50여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상정에 앞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결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영세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결정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영세 의원)

○議長 金學元 그러면 오영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 충청권의 미래가 달려있는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원안 추진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난 2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건설 수정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대전과 충청권을 포함한 온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과 함께 분노를 폭발시키고 원안사수를 위한 투쟁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사자인 연기군은 공황사태의 허탈과 좌절감을 표출하면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민들은 각종 세종시 수정설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원안추진의 불씨를 지펴왔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선언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허탈과 좌절, 분노를 넘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은 언론보도와 같이 세종시 최종발표를 앞두고 폭풍전야, 그야말로 고요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경악과 좌절감으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왜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과 계층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까!

왜 유령도시 운운하며 충청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정성을 갖고 이후에 세종시 수정문제는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원안추진만이 500만 충청인의 마음을 어우르고 5,000만 국민 모두가 잘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쓰고 있는 머리띠는 지난 연기군 조치원역광장에서 쫓겨대회에 참석해서 흙먼지 쌓인 아스팔트에 앉아서 연기군민과 충청도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싸우던 그 머리띠입니다.

정말 이 머리띠야말로 연기군민들의 애환과 눈물, 우리 충청인의 혼이 담긴 머리띠입니다.

칠십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또 죽기를 각오하는 단식투쟁,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고향의 이웃집에 살던 동네 아주머니께서 머리를 박박 깎고 영영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서 난생 처음 한없이 울어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결연한 의지로 이명박 대통령께 한 가지 마지막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세종시 수정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중단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8월에 장마지고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 임기를 막 마치고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해서 대흥동의 조그만 골목식당에서 저를 처음 만나셨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청계천 신화를 만든 그 당시 서울시장의 모습은 당당하고 야망에 가득차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연기군 행정도시가 제 고향입니다. 지금 저의 90이 되신 노부께서 고향을 지키고 계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대권을 잡으려면 중원을 얻어야 합니다. 충청인들은 과거의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것을 넘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무릎을 치면서 “업이야 업!” 이렇게 크게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업밖에 없어” 이 말을 재차 한 후 반가운 나머지 러브샷을 하면서 기뻐한 일도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청권을 다니면서 원안 플러스 자족기능에 대해서 십수 번도 더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국민과의 대화 시에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6개월 이상 열리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시면서 과거발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유령도시 운운하면서 그렇다면 교육환경을 더 플러스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대전시장께서 그동안 원안 플러스 국회를 이전하면 될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멍멍하게 들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요새 난국을 풀어나가는 한 가지 현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면 비효율의 중심에 있는 국회와 정부부처를 함께 이전하면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이제라도 길을 열어서 여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민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을 외면하게 되면 그 대가는 혹독하고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세종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3년 전 충청도에 찾아오실 때 그때 그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은 많습니다.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12월 14일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저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대전과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세종시 건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 자리에서 되새기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오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10시 22분)

○議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오전에 권형례 의원님, 양승근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오정섭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권형례 의원님, 양승근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세 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고, 오정섭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발언시간이 20분이 경과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며, 보충질문은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박성호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형례 의원(일괄질문)

(10시 24분)

○議長 金學元 그러면 먼저 권형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장께서 추진해온 현존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50만 대전시민의 수탁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그리고 세종시 원안추진 사수를 위한 노력에 미흡한 시정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곳곳 인도의 자전거도로는 통상 보행자가 걷는 길이 된 지 오래고, 보행자를 피해 요리조리 힘겹게 가다보면 각종 광고판, 불법주차차량, 노점상의 수레 등 온갖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턱이 높아 바퀴에 부딪히는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난달 말 완공한 대덕대로 자전거도로를 아찔한 자전거 다이어트도로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식 자전거도로는 차로 폭을 축소하여 자전거전용차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룡로 네거리에서 대덕대교까지 5.8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폭이 90~240cm로 균일하지 않고, 버스정류장 앞 자전거도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가 끊어짐 없이 도시 전반에 연결되어야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사고 위험성과 안전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문제가 속출하는가 하면,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바깥차선을 줄여 조성한 자전거도로의 폭은 불과 1.5m이며, 도로를 구분하는 분리대 높이는 고작 10cm입니다.

이것도 군데군데 설치해 놓은 데다 색깔도 검은색이어서 경계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우회전하려는 승용차가 분리대를 침범하는 위험도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9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로 인해 종전 인도 위에 설치했던 자전거도로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도로 폭을 줄여 공사를 하다보니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자 일부 위험한 구간에 해당하는 1.8km에만 U자형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구간은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안전성 문제와 함께 땀질처방이다, 예산낭비다 하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다른 도시는 우리 시보다 펜스 등을 더 많이 설치했는데도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서 사업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이어트식 자전거도로나 U자형 펜스시설 등으로 안전성을 멀리한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어 개선해서 진행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용역을 준 자전거정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6%인데, 이들에게 자전거이용의 가장 불편한 점을 물어본 결과 ‘도로가 자전거 타기에 위험하다’는 응답이 59.3%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도로가 자전거타기에 안전하지 않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시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아이들에게 마음껏 내달려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시사철용 실내 자전거 운동시설과 자전거 올레길을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자전거 동네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금년 개통한 갑천 등 3대하천 자전거전용도로 14.5km를 시작으로 123k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도심의 녹지축 공사와 연계하여 도심순환형 자전거도로망 같은 생활교통중심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탈대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언론기관들과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탈대덕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례로 2000년 이후 최소 20개소 이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분원들이 분소, 연구센터 형태로 타 지자체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부지의 무상제공이나 건축비 예산지원 등 특단의 당근책을 제시함에 따라 타 지자체로의 분원설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특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외의 국가R&D예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국가R&D예산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덕특구 출범 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대덕특구 중기재정계획에서 대덕특구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75억 원이 삭감된 데 이어, 내년 예산도 당초 697억 원에서 247억 원이 줄어 든 450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대덕특구의 정부육성 의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의 대덕특구 육성이지 변화는 국책사업 결정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과학기술과 연구역량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 바로 대덕특구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자기부상열차 및 로봇랜드 그리고 최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결정 과정에서 대덕특구를 외면한 것은 단순히

정치논리로만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굳이 대덕특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만큼 기술역량을 지닌 지역을 찾을 수 있고, 국책사업 유치지역의 연구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유치를 통해 얼마든지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지난 침복단지 입지결정 후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이 침복단지를 유치한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에 있다고 보도된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대덕특구 연구기관들이 연구할 공간을 찾아 이전하고 있고, 국가연구 예산이 삭감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의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탈대덕 현상에 대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대전의 미래선도사업 및 첨단과학산업 육성을 언급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대덕특구 활성화를 언급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서는 지금까지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들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대전시와 대덕특구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발전방향이 포함된 대전시의 미래발전방향을 새롭게 계획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의 발전이 곧 대덕특구와 각 연구기관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심어줘야 하며, 대전시 또한 대덕특구의 발전이 곧 대전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대덕특구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의 장기플랜과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브레인들을 대덕특구 내에서 발굴하여 대전의 주요시책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전략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탈대덕 방지 및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탈대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전시는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여 대덕특구 범위를 확장하고 주변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서라도 필요한 연구용지를 적시적기에 공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의 우수한 연구원들과 인재를 적극 유입시키기 위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전시 차원의 지원의지 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종시 사태는 최근 대통령이 대전·충청 민심인 원안을 외면하고 수정방침을 분명하게 공식 표명함으로써 극심한 국론분열과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며 엄청난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권 내에서는 오히려 수정론 폐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정치권에서는 축소된 원안추진논의가 있을 것이고 대전시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국회 이전논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국가 백년대계이자 정치권 최대 쟁점인 세종시 관련사안을 시정질문사항에 포함시켰는데 앞서 동료의원께서 예정 없이 이미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시장께서도 나름대로 적극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답변준비를 하셨을 내용과,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분야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리 준비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자료에 기술된 사항이지만 세부질문내용을 요약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첫째,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세종시 원안의 범위와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론으로 상처받아 분노하고 있는 대전·충청인을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대전시가 준비해온 노력과 성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둘째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우리 대전시가 어떤 강점을 갖게 되며, 그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을 마련해놓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대전시 인근에 건설된 새로운 도시에 대해 시장께서 발언한 국회이전방안과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네 번째 질문은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시장께서는 이번 세종시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1일자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입법도시로 만들면 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비효율의 중심에 있는 국회를 행정부와 함께 이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가 완전 입주하는 2030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교통이 발달된 유비쿼터스시대입니다.

시·공간적 격차가 없는 사회로 비효율성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화상회의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일산, 강북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시간보다는 세종시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깝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국회이전방안은 또 다른 위헌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현재는 국회가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보고 국회의 소재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공화국론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국민적 합의사항인 원안마저 여기면서 수정한다고 공언하고 또 서울대 제2세종캠퍼스 설립안이 계획에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시장님께서도 현정부와 여당이 법과 약속을 여기면서 법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또는 저항의 의미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이전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이전이 현실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하면서 어떤 계획을, 추진계획을 가지고 공표한 사안인지 이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충청권 3개 시·도지사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 충청권 현안과제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하며 대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또 다른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영·호남 및 강원·제주지역과 연대하여 원안추진을 사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어제 주제와 관련없이 질문과 갑작스런 정치적 발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총재한테 의원직 사퇴를 냈다면서 묘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소위 엘로우 저널리스트들과 안위를 뒤로한 사람들은 정치 쟁점화 또는 여론화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어찌보면 시장님께서 평소 소신대로 답변했든지 아니면 당혹스럽게 대처하셨든지간에 오늘 이 자리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지만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이번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발언은 대전·충청인 모두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종시 원안추진이라는 과제는 우리 15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500만 충청인과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려있는 대과제입니다.

우리 모두 당과를 초월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사수하여 대전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박성호 시장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대전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장이 보여준 소신과 우직함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대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정과를 초월하여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권형례 의원 시정질문서

.....

○議長 金學元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양승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양승근 의원(일괄질문)

(10시 45분)

○梁承根 議員 동구 출신 민주당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박성호 시장님과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이 오늘 방청을 위해서 시의회를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3대 국책사업 유치실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상태 의원님께서서는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랜드와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시의회 의원들, 시민단체와 언론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실패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비판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그 원인을 마치 참여정부에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셨고 심지어는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은 150만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사석도 아닌 150만 시민이 시청하는 의회의 시정질문 답변 장소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대전시의 교통과 주거복지 그리고 교육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부선연결도로 건설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과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06년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202곳의 정비예정구역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상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94곳으로서 46%라고 하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불과 8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고시 이후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대전시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지구를 지정한 것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각종 민원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소제동과 가양동 지역 2,300여 가구의 35만 평방미터의 방대한 구역을 정비사업예정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공급이나 건축물신·개축 제한 등 많은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제구역 일대는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가서 폐허된 빈집이 많아서 우범지대가 되어서 범죄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대규모 집단민원을 제출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전

시와 동구청을 방문하여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해보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저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동구청에 떠미는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분쟁, 주민불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언제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간에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시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사업시행협약서에 따르면 동부선연결도로 1,169m 중 사업구역 내 716m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하고, 사업구역 외 453m는 대전시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2003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되어 있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모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역 외의 도로는 이미 보상이 완료가 돼서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소제지구 사업지역 내 도로는 착공은커녕 편입용지보상도 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양동과 소제동 동부선연결도로 편입용지 소유자들은 지난 10월 대전시에 소제구역 사업지구 내에서 도로편입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토지제척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 가양동과 소제동 구역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물론 건축물 신·개축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사업지구 내 도로개설사업비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승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서 경제적 피해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재정착할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부선 연결도로 건설이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동부선 연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업구역 내 716m의 연결도로가 조속히 건설돼야만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동부선 연결도로가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에서 개설해 놓은 453m 도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이 투입된 21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동서관통도로의 동광장 주변은 매일 출퇴근시간이면 엄청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대전시와 동구청에서조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부선 연결도로 전 구간을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척을 해서 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995년도에 수립을 했고, 정부의 승인과정에서 1, 2호선이 승인되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1호선만 승인되고 2호선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선이 취소된 사유는 도시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율성 비율인 B/C가 기준치인 1.0보다 적은 0.73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검토를 할 때 B/C에 대해서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기준치인 1.0이 넘는지를 확인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수립 당시 B/C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용역회사를 잘못 선정했거나 아니면 용역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도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여건에서 순환선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B/C가 1.42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노선을 추가 보완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턱없이 낮은 B/C가 나온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시철도 2호선은 관저동에서 시작을 해서 서대전4가와 대동5거리를 거쳐서 가양동4거리를 거쳐 중리4거리와 유성을 거쳐서 관저동으로 되돌아가는 순환형노선이었습니다.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계획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원도심 지역주민들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적인 소외감과 자기권

리마저 빼앗겼다고 분개하면서 당초 노선인 순환형이 반드시 추진되어 원도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때 내년 4월까지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2호선 계획안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쾌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노선을 검토할 때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원도심을 통과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원도심 주민들의 한을 풀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존 호남선철도의 여유노선이 발생되니까 호남선국철을 활용해서 경부선과 충북선을 함께 이용해서 충청권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8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선로용량이 부족한 경부선의 조치원~대전 구간을 증설해서 계룡시와 대전 그리고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 계획대로 충청권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면 도시철도 2호선은 좀더 있다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서 미뤄지거나 또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경우에는 대전 통과 구간은 대전도시철도의 X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선선정에 있어서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청권광역철도망과 별개로 추진돼야 하며 도시철도 2호선은 반드시 순환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도시 대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와 교육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현대복지국가에서 교육기회, 교육환경, 교육과정 등 교육의 출발점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성과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학생들은 대전의 어떤 지역이나 어떤 학교에서나 공부하든 같은 교육환경에서 동일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으면서 똑같이 충실한 교육과정을 이수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모든 시민들은 학부모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대전의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가 대전교육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현안 문제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발상지였던 원도심의 많은 인프라가 서구와 유성구의 신도심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방적인 신도심 위주의 성장정책은 과거 명문이었던 동구지역의 학교를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대전을 동과 서로 확연히 갈라놓았습니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책을 펴나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국감 시 밝혀진 전국 고등학교 수능성적 공개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지적돼 왔던 대전지역 동서간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수능성적의 순위를 살펴보면 서구가 7위, 유성구가 32위인 반면에 원도심지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구는 65위, 동구는 91위 그리고 대덕구는 13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대전외국어고등학교와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거주지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 중학생수를 비교해 볼 때 서구와 유성구의 학생에 비해서 원도심권인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학생이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생수의 차이가 무려 10배, 10분의 1의 수준으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교육격차의 문제를 교육기관만의 문제라고 떠넘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동부지역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학력신장과 교육환경평가와 시설개선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서간의 교육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떠나고 많은 학생들은 동부에서 학교 다니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교육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인프라 즉, 학교주변의 환경개선과 인구유입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복지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교통 문제 등에 대해 대전시의 투자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 예산액 대비 비법정전입금 비율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0.27%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2009년도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

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총액 대비 29.2%로서 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교육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교육청의 많은 법정전입금의 확보입니다만 올해의 경우 비법정전입금이 전년 대비 57%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볼 때 대전시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교육은 지원이 아니고 미래의 투자임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미래의 동량들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명품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인재에 달려있고 인재를 기르는 것은 교육에 달려있고 그리고 교육의 성패는 학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양승근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學元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議長 金學元 권형례 의원님과 양승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호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연 이틀간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권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자전거를 타는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살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정책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먼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기치를 내걸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우선 타슈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인기리에 활용해서 타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슈시스템 자체가 새로 개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도시나 외국에도 판매를 해볼 구상까지 가지고 있고 자전거도로정책과 관련해서는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길을 내고 있는 것이 주지에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천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도 이용하면서 하천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면 출퇴근용으로든 가능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지요.

특히, 그 중에 하나로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길을 만드는 일도 통합된 자전거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저희가 대덕대로에 그것을 설치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깎리리아 타임월드 앞 네거리에서 자동차와 동일한 신호주기로 자전거 전용신호등 및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고 우선 사고위험지역에 U자형 안전펜스설치를 완료하고 보도블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으로 확대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앞 전용도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정차단속 문제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가 주정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구간이 혼돈스럽고 혼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전거이용자의 우선통행권 확보하기가 현재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횡단보도, 우회전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설치되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보도가 넓은 노선은 녹지대 분리를 조성하고 폭원 확보가 충분한 계룡로 노선은 간이화단 등을 구획하고, 택지개발지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전용도로 반영 등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차선 한 차선을 아주 감소시켜서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이 옳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전거 분담률이 4%인데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자전거 다이어트도로 문제에 다소 저희가 경험이 부족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실내 자전거 운동시설과 올레길을 만들어서 자전거동네를 조성하자는 정책제안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일반시민도 애용을 합니다만 그것을 지속하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 자전거와 친하게 하고 학생들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함이나 위험이 없도록 지원하는 문제가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자전거교육 등을 하는 부분에 지원하고 또 일정한 수의 학생이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거치대시설도 지원하고 학교교육과 연관시키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내외순환형 또는 도심순환형의 자전거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청호 주변을 연결하는 인근 시·군과 이미 논의를 마쳤습니다만 대청호 주변을 연결하는 대청호변 올레길 구상을 하고 거기에 보행이나 자전거길을 연결해서 함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덕특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일단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원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이 지원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구분한다면 우선 예산지원 문제와 용지확보 문제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 문제 그리고 투자환경개선 문제 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비를 투자해서 연구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한 5개 사업에 2008년부터 16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첨단기술상용화사업, 연구성과물테스트베드시범사업,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창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클러스트구축사업, 대덕특구연구개발서비스업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이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연구단지 와 연구소와 아울러서 벤처기업들도 상당한 호응과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지확보를 위해서 GB해제를 통한 특구 1, 2단계

동시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 2단계 지구에 임대산업용지 10만 평을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구 2단계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내년 6월이면 용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동지역 일대에 100만 평 정도에 달하는 최첨단산업화단지 조성도 구상해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연구개발확대를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 연구의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용적률은 80%에서 150%로 대폭 확대해줬습니다.

연구소 건물의 증축 및 가용지를 위해서 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연구소, 기업 설립요건도 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그 다음 투자환경개선지원을 위해서 대덕특구 투자조합에 800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2006년부터 조성해서 전체의 70%를 특구 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재 20개 기업에 418억 원이 지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투자기업 중에 세트랙아이 등 2개 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또 기업유치 확대를 위한 특구를 알리기 위해서 YTN가이드에서 특구소식이라는 것을 별도로 홍보하고 있고 우리 인근에 있는 특구지원본부도 발맞추어서 인프라확충사업, 네트워킹사업, 혁신클러스터사업, 기타 토털디자인기반기술산업화 서비스 등으로 협력해서 지원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소가 증가하고 벤처기업들이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6년에 786개소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94개가 늘은 980개소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 R&D센터는 2006년에는 없었습니다만 2009년에 9개가 늘어났습니다.

벤처기업도 2006년에 464개이었던 것이 2009년은 230개가 늘어난 694개소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2006년에는 14개소였던 것이 2009년에 4개가 늘어난 18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수출은 2006년에 1억 8,500만 불이었습니다만 2008년에는 2억 2,300만 불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구단지의 기술개발 실적은 LG에서 한 것이지만 팩티브라는 신약을 개

말하는데 성공을 했고 에트리에서도 그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도 연구단지를 활용해서 우리 시 발전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와 대덕특구 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동반발전을 위해서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검증, 디지털TV, 자전거무인대여관리시스템 소위 타슈, 또 전국 최초 테스트베드구축사업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시 연구기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연기관장 협의를 통해서 특구 내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특구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특구가 인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대덕특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벤처기업의 육성, 산·학·연 등 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와 특구 간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하면서 테스트베드사업도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카이스트와 연계하고 있는 소위 온라인전기버스 문제도 이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R&BD센터,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 한국뇌연구원 설립 등도 특구 내에 있는 기관들과 공동노력을 통해서 유치와 신설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본 목적이 연구단지 연구성과를 상업화하고 사업화시키는 기본방향에 서있기 때문에 우리 대덕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대덕방지에 대한 걱정을 주셨습니다.

물론,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대전지역의 목표만을 위해서 설립되지는 않은 국가단위의 연구소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덕특구 내 출연연의 타지역 분원·분소 등의 설치 등은 정부의 성과 확산 및 기능상 타지역 설치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은 바닷물을 이용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임해 지역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거의 연구력 인프라가 부족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토지 무상제공이라는 인센티브와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1976년도부터도 분원·분소 설립이 추진되었고 총 35개 분원·분소 중에 2000년 이전에 15개, 2000년 이후에 20개의 분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구 내 민간연구소 및 기업들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9년 출연연 분원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원설치의 원칙적 불허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원설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설립됨으로 인해서 특별한 요건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향이 아닌가 하고 추정됩니다.

시에서도 정부 출연연의 타지역 내 분원 또는 분소 설치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용지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성과의 사업화촉진을 위해서는 대덕특구특별법에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여건 완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의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해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도 주요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레저라든지 하는 종합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시정질문은 상당한 의원님들이 세종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질의를 하셔서 다소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입장에 따라서 소속하고 있는 정당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해서 혹시 자칫하면 정치적인 논쟁으로 흐를까 하는 것도 사실은 답변을 드리면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권형례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원안의 범위가 무엇인지 또 보상해줄 것인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어제와 중복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이 행정과 중심과 복합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오랜 과정을 거쳐서 포함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중심이 되고 있는 행정부 문제는 9부 2처 2청이라고 이미 수 없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신뢰와 효율이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원안에다 국회라는 기능까지 옮겨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원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치의 일각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이 아니냐 하는 등의 의견을 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고 소신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근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각각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위헌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국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상황이 다르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앙언론에서도 의미 있는 의견으로 봤기 때문에 시론에 게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지레짐작해서 치부해서 포기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해봄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이런 논리를 정리해서 국회의장께 건의서를 보낼 의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동조하신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종시 원안추진과 관련해서도 그 사이에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종시가 새로 생기면서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근에 도시가 생기면 위기와 여러 가지 기회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로서 바라는 것은 세종시가 우리 시를 수탈하는 기능이 아니고 상생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와 상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길 희망하는 것이죠.

또 세종시와 협력사항 중에 하나는 제가 시장이 되어서 맨 먼저 소위 물장사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경합을 벌이면서 행복도시에 대전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있는 정수능력을 가지고 우리 상수도 단가도 내리면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행복도시에 상수도 공급을 따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화장시설도 좋은 시설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아진다면 국가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단지, 걱정은 대전시에 있는 인구가 그쪽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대단히 걱정스런 일이 되겠지요.

그런 일이 하기를 같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경쟁하는 기능들이 존재한다면 결국은 양 도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도시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려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기원하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연계사업을 보면 광역 및 도시교통시설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삼동에서 세종시의 연결도로 확장문제와 또 테크노밸리에 연결도로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행복도시에 용수공급하는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 담기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권형례 의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소위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최근에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께서 총재에게 사퇴서를 냈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또 이번 이슈와 관련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얼마 전에, 한참 전이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의원직 사퇴를 한다는 설을 제출했다는 얘기도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관심있는 사안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하는 것은 매우 관심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권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근 의원님께서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셨나요, 아니면 모두발언부터…….

유인물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소제지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 것 반갑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의 원도심의 중심이 역을 중심으로 한 앞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청 쪽으로 발달이 되었지만 서대전 쪽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제지구의 정비가 우리 도시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랜 기간동안 숙원이었던 동서관통도로가 통과됨으로서 더더욱 그런 필요성이 강해졌지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연관해서 지적하신 대로 대전에 제가 시장이 되기

이전에 이미 202개소의 정비예정지구의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기가 늘어지면서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202개의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 구성 이상의 단계를 거처온 것은 총 94개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45개소이며 준공된 것이 2개소로 다소 부진하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향후 정비계획추진과 관련해서 202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2020도시주거 및 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등을 좀더 강화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에 민간영역에 맡겨놓았던 재개발 분야 중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보다 투명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 예산에 8개소에 32억 원을 반영했고 9개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비의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 국비지원금액 총 508억 원 중에서 우리 시가 26%인 13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따나가는 재개발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고양되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순환형 정비방식을 적극 도입을 해서 재정착률이 높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부사동 무지개타운처럼 커뮤니티시설 순환형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건립을 해서 해당지역의 커뮤니티를 높이고 순환형재개발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5년까지 6,000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구청과 토지주택공사 간에 사업시행을 체결한 후에 2015년 준공목표로 현재 아파트 평형선호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중이며 아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병합을 했고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미착공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추진여부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토지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당초 계획된 부분은 차질 없이 국비, 시비 140억 원을 지원해서 건물을 철거중에 있고 내년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에 있는 716m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대전시내에 소제지구 한 군데만 있다면 큰 어려움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형평적으로 논의되는 여러 지역이 함께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신중한 고려를 해볼 요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토지공사로 하여금 원안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시행주체를 찾아보는 문제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는 문제도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지금 토지공사와 관련된 문제가 지연된다고 해서 선뜻, 당장 그 지구 내의 도로를 시비로 계상하겠다고 확답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구와도 검토를 다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소제지구에 대한 개발이 촉진되어야 된다는 면은 전적으로 공감할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당초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철도 문제는 여기 계신 시의원들 어느 분 하나도 다 내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의 사업시행 타당성분석과 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인구나 교통수요 등 사회적 경제지표 적용에 있어 객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광주보다 낮은 원인은 인구 예측은 광주보다 우리 시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 측면 특히 지역낙후도 측면에서 광주에 비해서 낮게 분석되어서 최종적으로 B/C가 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B/C 신청하는 건도 2005년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서 그 심사가 1년이 걸려서 2006년 말 정도에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안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역에서 다 내 앞으로 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교통 여건이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되 경제성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추진되는 대로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 시민과도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안을 확정

할 계획입니다.

광역철도망과 관련되어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오해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철도망을 좀더 도시교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 아니면 인근 시와 연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금년에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영되지 않으면 한 10년 이상 뒤로 미뤄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금년에 우선 충청권 광역철도망구축계획을 인근 시·군과 함께 공동건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충남도·대전시·충북도와도 다시 연대해서 건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어디 공간을 이동하실 때 신속하게 정시성을 가지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국철을 이용하는 문제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문제를 중복적으로 조절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협력 연계를 시켜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2호선은 2호선대로 지금 용역에 중요함이 있고, 또 광역철도망 구상은 지금 초기단계에 반영해서 호남선 철도망을 활용하는 구상이 아마 먼저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구상하고 경부선도 활용하는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데 최근에 녹색교통망을 확충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께도 이런 의견을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 지하철노선은 노선대로 추진을 하되 상호 연관성을 갖는 일이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섹터가 교육과 환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는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이미 2007년 5월에 제정을 했고, 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1,525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비 숫자는 민선4기에 525억 원으로 민선3기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것

을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2007년에는 3위였고 2008년에는 2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총예산 대비 비법정 전출금 규모는 2008년으로는 대전이 0.79%로 1위입니다.

그간에 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의 중심센터를 만든다는 개념 하에서 담장을 없애서 공원화시키고 학교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등을 지원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울러서 열린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어학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안별로 맞게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상수도요금도 인하시켜 줬습니다.

아울러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 급식비를 초등학교 100%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의회에서 협의해 준 덕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민선4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해입니다.

특히, 배움터지킴이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히 금년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해서 32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서 학교시설을 지원하고, 지원한 학교 내용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호주 원격화상 영어교실도 5개교에 2억 원을 들여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에 교육지원 총 예산의 65%를 투자하고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타 원도심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가 낙후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적인 낙후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이 떠나는, 주거환경이 불편해서 떠나는 그런 부분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유턴 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 역세권개발, 고속철도변 주변정비사업,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 목척교 르네상스사업, 신탄진 프로젝트 등 원도심의 개발 자체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들이 부연설명할 것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비법정전입금은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되어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만을 의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복지관건립비, 기성동에 저희가 짓고 있는 것이 있지요?

전국체전 대비 하키장 조성비 등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 집행된 부분

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2008년과 2009년에 시비투자 교육지원사업비는 392억 원으로 민선4기 총 합계는 525억 원입니다.

우리시 교육지원 총 예산인 비법정전출금은 총 규모 면에서 특·광역시 중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예산 대비해서는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 2008년의 57%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기성복지관 건립이 완성되었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키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등 이 비용이 약 80억 원 가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교육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선4기의 교육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서류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 교육지원사업은 4개 분야, 30개 사업에 439억 원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우선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소위 위스쿨 건립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 학교시설 주민개방사업도 21개를 더해서 민선4기에 목표했던 100개 교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관 확충사업도 4개소에 61억 3,6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도 추진을 하면서 공원화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급식비지원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학교지원 사업내역은 별도로 의원님께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말씀 끝에 어제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로봇랜드와 자기부상열차가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안들입니다.

이것들이 최근에 다시 종합적으로 질문 대상이 되는 자체도 저로서는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로봇랜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추후도 존경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누를 끼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시 로봇랜드가 발표되었을 때 경남우리신문에 2007년 11월 15일자 이진화 기자가 쓴 보도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중간 생략하고요.

“1위와 2위 간 점수차이의 사전유출설 등 의혹과 심의과정과 평가점수 미공개 등에 대해서 산자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의혹은

최종결과가 발표된 13일 김태호 경남지사의 기자회견에서 로봇랜드가 마산으로 들어서도록 흔쾌히 결정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강조해서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경남 마산이 사전에 낙점이 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하는 경남우리신문 기사를 근거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산을 다 넘고 장애를 넘고 우리 대전에 모든 국책사업들을 다 유치했으면 가장 좋은 일이었겠습니다만 그 사이의 경위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경남지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 추후도 다른 뜻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權亨禮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다음은 양승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梁承根 議員 의석에서 - 예.)

예, 잠시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양승근 의원) 및 답변

○議長 金學元 그러면 양승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議員 박성효 시장님으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재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거기에 사는 주민 대표자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면서 너무 불편하니까, 오늘 본 의원이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시정질문을 언제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하셔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알맹이가 없어요.

전에 그 주민들이 동구청이나 시를 방문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답변한 그 원론적인 얘기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도 얻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원망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공사에서 언제쯤 할 것인가, 왜 지금까지 주택공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1,169m에 대한 동서순환도로, 동부선 연결공사 1,169m지요?

그 30m 광로인데 그것이 동서관통도로만 그렇게 해놓고 또 일부에 450m는 시에서 해놓고 그 나머지를 대전시에서 하라고, 저기다가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그 도로가 건설이 되면 그것이 소재구역 사람들만 통행하는 도로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대전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저 소리치는 주민들의 합성을 보십시오.

그런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정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에서 가져온 그 문안을 가지고 그냥 읽어주는 그런 식의 답변이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십니까?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學元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양승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재지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견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소제지구의 내부적인 기반사업비를 시비로 한다고 결정을 해놓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선거구 안에 있는 모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시비로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의원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따라서 시급과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토지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더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밖에 지금은 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제지구 말고도 현재 진행되는 곳이 45개소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지역과 관계 안 된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와 공식적으로 소제구역은 계획과 다르게 그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설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나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두에 드렸다고 소제지구 일대가 원도심 활성화나 역세권개발과 연관성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가 지원해 드리겠다고 경솔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梁承根 議員 의석에서 - 그러면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제척시켜 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예요.)

그런 부분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梁承根 議員 의석에서 - 주택공사에서 만약에 시행할 의사가 없고 언제쯤 할지 모른다면 제척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1안은 토지공사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맞는 얘기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분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시행자를 다시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척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일이지 어떠한 결론 낸,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랄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또 노력을 함께 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學元 보충질문 하신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오후 2시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 오정섭 의원(일문일답)

○議長 金學元 오정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박성호 시장님께서서는 바로 옆에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서구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성호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대전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써 민선4기와 5대 의회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주요시정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짚어보고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대전광역시 재정 분야, 엑스포 재창조계획, 그 다음에 시장 공약 사항 분야, 그 다음에 외자유치 분야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대전광역시의 방향, 즉 진로는 예산에 모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5%가 증가한 3조 853억 원으로 이 예산을 친서민정책 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내세운 정책기조와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는 2009년도 대비해서 2.9%가 증가된 1,125억 원, 전체 4.2%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09년도보다 4.1%가 증가한데 불과했고 이것에 비해서 나머지 보건환경 분야는, 예를 들어 2009년보다 22.5%, 사회복지 분야는 13%,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5%가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볼 때 내년도 예산이 과연 어려운 지역경제살기기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오정섭 의원님께서 우리 친서민정책과 일자리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의 항목을 분야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친서민정책과 일자리추진은 다른 분야에서도 포함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정책기조를 친서민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향에는 저희가 추호도 변함이 없고 모든 시정의 중심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한 예를 들어 계약을 만드는 일도 특별하게 어디에 넣어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것도 간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있고 대학생들에게 특별하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생 종합대책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책별로 이렇게 봐주시면 오히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예산 항목을 내용으로 보면 너무 커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통상 친서민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지금까지도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년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정도만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을까, 지속적인 최대의 큰 증가폭을 보이는 부분이 복지 분야입니다.

일자리도 경제과학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국토와 관련된 개발 분야도 있고 보건·환경에 관련된 분야도 있어서 그런 주제를 저희가 시정의 중심으로 잡지만 표시는 이렇게 항목별로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물론 각 분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친서민정책이라고 하면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吳丁燮 議員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조기집행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대전시는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자 손실이 무려 50억 원이라는 손실을 봐가면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했는데 바로 다음 연도에 내년도에 명목상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이라든가 지역개발 부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좀 지역경제 부문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친서민정책 기조에 걸맞게 정말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문제라든가, 자영업자육성보호라든가,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 등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항목별로는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에 시정의 최우선을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내년부터 임대주택 6,000호 건설사업도 시작이 됩니다.

하여튼 항목은 다르더라도 시정의 기조에 우리 친서민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우리 자치구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300억 원, 추경 200억 원까지 포함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빚까지 얻어서 재정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받는 쪽인 구에서는 과연 뼈를 깎는 그런 예산절감책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구 예산 씬씀이를 보면 여전히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전시가 자치구와의 재정지원 문제도 재정립할 때도 되지 않았나, 빚 얻어서 자치구를 계속 지원해 주는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정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그것도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여부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제도적 정비 이런 등으로 해서 기본적인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만 그런 것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가 유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더 특별히 대전광역시의 자치구는 시라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있는 또 하나의 시민이자 구민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려운 점들을 모른 채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구 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재정이 괜찮은 구하고 괜찮지 못한 구하고는 심지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수당도 차별이 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큰집에서 작은집의 어려움을 너무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번에는 300억 원의 채무를 내서 우리 구의 어려움을 최소한의 입장에서 살피주려는 노력을 한 것이고요.

구의 재정운용상태는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성과에 맞게 옳게 근무하는 데는 잘해주고 방만한 데는 조금 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吳丁燮 議員 그 다음에는 대전시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대전광역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국고지원금을 비교해보면 대전광역시민으로서 차별대우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순수한 국고보조금을 보면 매년 약 1,100억 원 가량 광주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방교부세까지 합치면 매년 약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 가량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 차별 액수를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를 합치면 약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대전이 불이익을 받았습시다.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어느 정도 그러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과거의 홀대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시장께서는 지역 정치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고 계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참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항상 우리가 광주하고 비교가 되는데, 우리 시 재정규모는 전국에서 15 내지 16위 수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울산에 이어서 16위, 아주 끝에 달한 입장이지요.

그래서 일시에 재정규모의 획기적인 개선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재원 규모를 보면 광주시를 기준으로 2007년도에는 우리가 광주의 68%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올라가서 2009년에는 광주의 80% 수준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광주보다 적게 받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분야 수급대상자가 광주가 우리보다 많고 국가지원 지방도사업도 도로개량비가 많은 것이 광주의 재정수요를

많이 유발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가 지방세 수입이 많아 적게 받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광주가 세입차가 줄어 들어서 격차도 아울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광주가 우리보다 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삶의 질이 가장 좋은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래서 슈퍼브랜드위원회에서도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았지요.

한마디로 크게 말씀드리면 광주보다 대전이 살기가 좋은 도시라는 증명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적하신 대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표 나는 것은 인구 규모가 우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가 2명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서 계제에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적정하게 늘려가는 것도 이런 일에 대항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것을 제기했습니다만 그게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시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이 문제는 대전시가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어떻게 타개책을 세울 것인가, 또 사실 지역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부채를 어떻게 시민한테 그분들로 하여금 동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성적표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국비를 확보했는지 대전 시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뭔가 좀 지역 정치인들과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확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시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지금 대전시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많은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명상가 하천점용료가 1993년부터 현재까지 41억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이 됐지만, 홍명상가가 철거됨으로써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속 시원하고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철거상인들이 준 눈물의 감사패는 잊지 못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맞습니다.

○吳丁燮 議員 그러나 한편으로는 홍명상가는 철거가 됐고 41억 원을 납부해야 될 홍명산업은 재산이 없어서 무자산 법인으로 남아있고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전시가 지금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홍명상가에 대한 체납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장을 맡기 이전부터도 그런 문제가 원인적으로 발생이 돼서 대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업무관리를 확실히 하는 계기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吳丁燮 議員 이 문제는 내용이야 이미 오래 전부터 누적된 얘기지만 대전시의 체납자 관리라든가 징수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1993년부터 체납이 됐는데 어느 해는 뭐 일부를 받고 또 어느 해는 반만 받고 또 어느 해는 완전 미납된 상태고 이렇게 죽 흘러온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대전시하고 계속 그쪽에서 협상을 요구했지만 대전시가 너무 안이하게 고집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41억 원이라는 체납된 세금이 커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5대 의회에 들어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첫 해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대책을 세워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고 받을 만큼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 답변은 이 문제는 보상비가 나갈 때, 철거할 때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상계처리 했는데 상계처리 하는 방법이 또 이상합니다.

위에서부터 상계처리 해온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2009년, 2008년, 2007년부터 상계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못 받을 것을 예상하고서 그렇게 행정을 펴온 것이 아닌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소박한 선량한 시민들은 자동차세, 재산세만 안 내도 압류를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법인이 어느 해는 내고 어느 해는 안 내고 1993년부터 2009년까지 41억 원이라는 돈을 채납해서 결국은 이것을 결손처리 해야 된다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시민한테 어떻게 이것을 변명할 것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연도별로, 사안별로 언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원인이 생겼는지를 한번 규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의회도 상당히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790억 원이라는 예산을 2010년과 2011년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이제 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언뜻 보면 앞으로 이전해야 될 시설에 원래 정상대로 7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것은 예산의 과잉투자 아니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은 지금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세부계획이 세워져서 구체화시켜서 실현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시설을 해서 낭비요인이 될지 그 기간 동안에도 시도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 규제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전 시민의 과학공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의 대표였던 엑스포과학공원이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5대 의회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임기 초기에 이 문제를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면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임기 초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 문제를 해

결하십시오' 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만 결국은 외부 감사에 의해서 청산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청산명령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엑스포 재창조라는 이름으로 용역결과가 지난 8월 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현재까지 시장께서는 엑스포 재창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엑스포 재창조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엑스포는 2008년 4월 24일 청산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을 11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줄이고, 정원도 101명에서 68명으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현원도 106명에서 64명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해왔습니다.

엑스포 관리방안 타당성용역 결과 법인청산 시에 엑스포과학공원을 운영할 조직과 인원으로 개편, 감축을 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엑스포 관리방안 타당성용역을 진행하면서 관리주체에 대한 결정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문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제와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 재창조 방안이 동시에 진행 중으로써 청산만 먼저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 재창조와 연계해서 관리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과학국에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까지 엑스포 재창조 기본구상 및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진행과정에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개념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HD드라마타운이라든지 또 뇌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들을 작성 중이라 12월 중에는 공모지침서를 확정해서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4분기나 그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 안에는 제안공모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본방향은 그 지역에 대한 토지 활용도를 높이면서 우리 지역경제나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제안서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될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일단 방향은 공모방향으로 결정해서 공모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吳丁燮 議員 방향은 그렇다면 지금 용역결과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역결과가 8월 말에 나왔는데 그 용역안 대로 엑스포 재창조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것은 엑스포과학공원을 어떤 식으로 유치할 때 체크할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건데 그 후에 드라마타운하고 뇌연구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조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 뇌과학연구원도 사실은 금년 내에 선정을 한다는 정부방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것도 유동적 변수에서 고정변수가 되는 것이지요.

하게 되면 그것은 얻는 것이고 안 하게 되면 다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HD드라마타운의 규모나 예산 진행상황도 국회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전망은 조금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이 확인되는 과정도 또 필요한 일이라서, 사실 HD드라마타운도 7만 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면적이라서 그런 부분을 줄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약간의 신축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임대시설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아마 2, 3년 내 임대가 종료가 됩니다.

단지 문제가 큰 것은 꿈돌이동산이지요, 장기간 남아 있으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국책사업유치 등을 위한 유보지역으로 전체를 해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 업무처리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공모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吳丁燮 議員 이 용역결과를 보면 1안, 2안, 3안으로 제시를 했고 거기에서 3안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안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공모, 민간업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공시지가 수준으로 공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60층 규모로 제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민간업자를 유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시장께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계

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임기 말이고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대로 하다 보면 이것은 또다시 특혜성 논란에 휘말리게 될 테고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아직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의견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성격상 과학공원이지만 과학공원에 앞서 시민의 공원이며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 공원을 제대로 살리려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시민이 바라는 그런 공원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련해서 상당히 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축하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7대 분야 78개 공약사업의 평균진도는 7월 말 현재 7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추진율은 높지만 집행액을 보면 총 소비액 8조 원 중에서 2조 1,000억 원이 집행돼서 3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이행률이 높는데 집행 액수별로 보면 이행률이 낮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칭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발표한 것이 7개 분야에 7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임기 내 사업 60개와 장기화될 사업 18개로 구분되어 있었고, 임기 내 사업의 경우 금년 말까지 60개 사업 중 38개가 완료가 되었고, 22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면서 평균 이행률은 96%라고 평가됩니다.

18개 장기사업과제의 경우 평균 이행률이 40%에 달하고 있어 이렇게 장기사업과 큰 규모의 사업이 뒷 부분에 있으면 아마 예산의 집행률은 좀 떨어지지 않

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고도 고마운 것은 그래도 시민단체인 전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전국 최우수로 평가해 줬다는 내용을 저희는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또 우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議員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장기사업 그러니까 4대 민선이 끝난 후에까지 계속 추진돼야 되는 18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 사업이 중단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개의 경우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수장이 바뀔 경우에 전임 수장의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외람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공약사업은 이렇게 잘 추진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대전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들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만 앞서 의원들도 거론했지만 대전 지하철 2호선 문제, 이 문제도 아까 B/C타당성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시장께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진행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08년도인가 도시철도사업단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폐지했습니다.

그때 이유는 1호선이 완공이 됐고 더 이상 조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의회에 조직개편을 요청했던 겁니다.

1년이라는 공백기간을 거쳐서 금년 7월인가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그것이 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해서 도시철도기획단이라는 것을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 중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늦어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업무를 하다보면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조직에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일할 때 보다보면 집중적으로 할 시기가 아니고 준비할 시기나 이럴 때는 그만한 인원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부족한 곳에 인력을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틀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하철 1호선이 완공이 되고 지하철 2호선 문제가 늘 거론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하철사업은 상당히 긴 절차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시는 대로 용역을 거쳐서 또 한 가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 전에 이미 시민들 사이에 노선에 대한 또 차종에 대한 동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기본적인 기본설계나 실사를 해나가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철 관련된 빚을 2011년 말에 돼야 갚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속도라면 2013년에 착공할 수 있음이 예견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큰 무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데도 적절한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지하철 1호선이 준공할 때 10년 걸렸습니다, 10년.

2호선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 희망사항이라면 빨리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절차나 지원문제 때문에 시간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의원님들 많이 논하셨습니다만 노선을 정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늦은 것이 아니다, 우리 재정규모나 합리적인 노선절차라든지 그것을 다루는 차종이라든지 기종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저로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목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고 중앙부서와의 어떤 협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는 삼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예비타당성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전시에서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예.

○吳丁燮 議員 그 다음에 한 가지 숙원사업 중에서 대전시의 선거구 문제입니다.

방금 시장께서도 광주에 비교해서 국회의원 수가 적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난번 총선 때 상당히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언론, 또 우리 시에

서도 문제제기를 했다가 다시 또 선거가 끝나면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 때가 되면 또다시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물론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만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바탕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문제를 잠재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계속해서 언론에 부각을 시키고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는 관철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아마 그 문제제기 자체를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시장인 제가 제기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지는 꽤 오래된 시절이었지만 별로 제기된 사항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총선 전에 시장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의회와 또 시민단체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고정적인 틀 때문에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는 국회의원 수가 우리보다 2명이 많은 그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계적인 단순 논리에 의한 합리성 문제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적어도 시장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함께 차분하게 노력해서 지역의 이익이 대변되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吳丁燮 議員 대전시가 이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철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평소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자유치를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시장께서 발표한 성북동 관광단지개발 관련해서도 이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의 시선은 아주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주관사인 에코팜랜드라는 회사의 실체가 뭐냐, 이 회사의 대표가 20대이고,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고, 회사 사무실조차도 소재가 불명확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접수를 해서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절차도 오래 걸리고 또 시행착오도 걸리고, 의사가 왔다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계속 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성과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사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더 점검해보고 체크해 보고 또 보완책을 아니면 보증책들을 강구해 놓고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것들이 아마 언론홍보나 이런 것들이 나기는 낫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단백질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회사가 외자유치 됐는데 이름도 라이오탑코리아다, 6,000만 불 투자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MOU를 맺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MOU 맺은 사항들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경험한 것이지만 해외교포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도 또다시 새로운 시장으로 봐서 적극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 4월에 시애틀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오는 기회도 차질 없이 제가 준비하고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자유치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외자유치에 대해서 특히 MOU체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민선 3기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알제리하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한다 뭐 한다, 상당히 그때도 대전시가 들쭉거릴 정도로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혼조그룹과의 특급호텔문제 그것도 역시 IAC총회를 겨냥해서 만드시 IAC총회 때에는 특급호텔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외자가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대전시 문제뿐만 아니라 인접,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걸쳐서 볼 때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외자유치를 했다고 한 10여 차례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건이 다 10여 년에 걸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소송까지 휘말려서 곤혹을 치르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민간업자들은 그 성사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하고 같이 일본에 갔던, 대전시에서 관이 개입했던 혼조는 실패를 했지만 민간사업자가 같이 갔던 비즈니스호텔은 성사가 돼서 도요코인하고 지금 둔산동에 골조가 다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민간업자들은 전문가이고 꼼꼼하게 챙기고 또 그 사람들에게 발목 잡히지 않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런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성사가 되는 반면에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또 언론으로부터 불신 받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는 그야말로 이용당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포기업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차라리 국내 대기업하고 그런 투자협약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교포기업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저는 대찬성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적어도 315개가 넘는 기업들이 민선4기 동안에 유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실적대로 좀 인정해 주시고요.

혼조그룹 문제도 의도성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경제나 국제경제가 어려워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계약금을 떼이고서까지도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자유치는 국부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 아마 정부로부터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또 처음에 마음먹은 것이 끝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비즈니스호텔 도요코인 유치하는 사업도 우리 지방정부가 깊게 개입하고 지원했던 사항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지금까지의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동 관광단지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엄청

난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 예산낭비가 뒤따를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불신은 말로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제도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의주시하면서 꼼꼼하게 챙기고 또 진행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하여튼 좀 잘 챙겨서 의원님들에게 실망 안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의원님들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적절치는 않지만 국가가 전부 동원된 평창동계올림픽 문제도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시도해서 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만 국제관계나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가끔 의도치 않은 변수가 생긴다는 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吳丁燮 議員 마지막으로, 질문요지는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대전의 현재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전의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시·도보다도 선거 조기과열이라는, 이상하게 대전이 선거가 조기과열됐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인 우리 시장님께서서는 선거과열을 진정시키고 또 정상적인 선거흐름으로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밖에서는 벌써부터 각종 단체들이 ‘내편이다, 내편이다’ 벌써 갈라지고 또 각종 인터넷뉴스상에는 댓글전쟁이 일어나고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대전이라는 도시가 벌써, 6개월 이상 남은 지방선거 판도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서는 특히 공무원의 중립성, 적어도 우리 공직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 또 현직 시장으로서 적어도 우리 대전에서만큼은 정상적인 선거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이 분야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대전이 너무 조기로 과열된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참 됐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가 밝힐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는 일도 아닙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는 현직 시장으로서 아직까지도 시정 자체를 위해서 해야 될 업무가 상

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에도 지금 바쁜 사정입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보고 지나치게 업무중심적이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밖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선거를 앞둔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답답하게 앉아서 업무만 챙기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선거의 조기 과열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 내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고, 과열된 선거풍토에 대해서는 과열되지 않도록 제가 관장하는 우리 시청조직 내에서는 단단하게 일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정치계에 계시는 분들 또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우리 지역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애를 쓰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건의도 함께 드립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시장님께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또 행정력을 겸비한 깨끗한 시장님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은 일로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피곤하실 테지만 마지막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쉬었다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님 질문 준비되셨지요?

(「잠깐만 쉬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시장님이 많이 피곤하신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이정희 의원(일괄질문)

○議長 金學元 계속해서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議員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과 대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관광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노력의 하나로 관광산업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고, 세계 총고용의 8.4%를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잠재력 높은 미래산업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2007년 ‘동북아 과학관광 중심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제4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에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행정에서 관광 분야는 항상 변두리에만 머물며 관광자원의 빈약 만을 탓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 민선 4기 들어 관광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규정하고 핵심정책 이슈로 선정하여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무려 1,200만 명 유치가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물론 대전시와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대전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는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목표설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관광을 핵심정책이슈로 선정하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대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의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속성과 도시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연상이나 감정까지를 포함하고 관광행동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도시 간 경쟁입니다.

이것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제60회 IAC총회 유치 과정에서 상해, 프라하 등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선진도시들은 도시 브랜드 육성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21세기는 바야흐로 브랜드 경쟁의 시대이며 국가 및 도시브랜드가 상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어떠합니까?

2007년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의 관광이미지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전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로서 과학중심지, 행정중심지, 교통중심지였고,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 정도에 있어서는 엑스포과학공원, 유성온천, 월드컵경기장의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대전 관광에 있어 교통을 제외하곤 대부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향후 방문 희망지역 모두에서 울산, 광주와 함께 대전은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관광목적지로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대전을 어떤 이미지의 도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 오셨고, 어떤 설계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시 관광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관광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크게 정책, 기획, 개발, 규제 등과 같은 관광행정을 비롯하여 조사연구, 교육 훈련, 마케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관광문화재과에서 관광기획담당, 관광산업담당 등 2개 조직 13명이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광행정력을 비교해 볼 때 인력 측면에서는 제일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타시·도는 관광 기획기능과 홍보기능을 구분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홍보기능이 기획기능에 포함되어 있고 관광 홍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관광행정의 위상이란 가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관광홍보 내지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벤션 업무도 문화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업무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과 컨벤션은 동일 부서에 존재하여야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컨벤션 업무는 관광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문화산업과는 「문화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대전은 관광 분야에 있어 타시·도와 비교해볼 때 빼어난 천혜의 관광자원도 역사적 유물·유적지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홍보예산은 전국에서 만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의 관광자원을 잘 홍보해서 외지인이 와서 보고 즐겨야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외지인을 대상으로 대전 관광을 소개하는 예산도 전략도 미미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년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충남·충북 세 개 시·도를 대표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홍보마케팅을 펼친다지만 그 이후에는 대전 관광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이 만들어지는 관광자원의 운영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자연환경보다는 인문환경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도시 기반시설이 관광자원화되는 도심형 관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된 엑스포다리 경관조명, 테마테크, 엑스포 남문광장의 잔디광장, 유림공원, 한밭수목원 3단계 등 새로운 도시 기반시설도 관광자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문광장의 공간재창조사사업과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별도의 조직도 예산도 운영프로그램도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질 경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과 조직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문화·관광시설들과 문화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벤션산업을 대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7년 대전컨벤션센터가 개관된 이후 우리 대전시민들은 많은 새로운 경험들

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60회 IAC총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국제회의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암스테르담의 국제컨벤션산업협회(ICCA),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 등 컨벤션 관련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면서 컨벤션산업이 대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컨벤션산업협회 방문 시 제공된 아시아 국가의 회의산업 상호 비교 자료는 대전시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어 회의를 유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고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ICCA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마케팅 전략 분석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컨벤션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대규모 회의 유치는 많은 편이므로 점차적으로 중소규모에 대한 유치 노력이 필요하며, 주제별로는 의학 분야가 국제회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컨벤션센터가 회의를 유치하면서 이렇듯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IAC총회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도 몇 차례 치른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히 회의만 서둘러 하고 회의 참가자들이 외지로 나가 관광과 숙박을 한다면 실속없는 허울뿐인 컨벤션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전을 체류형 컨벤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성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도 컨벤션 참가 주요 인사들은 청주의 라마다 르네상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여백제재현단지 내에 롯데호텔까지 지어진다면 컨벤션 참가자뿐만 아니라 유성지역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일본 관광객까지도 발길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 주변에 특급호텔의 유치뿐만 아니라 유성지역의 호텔도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시설정비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KOTRA의 대전무역전시관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는 갑천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 호텔부지에는 전시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해야 합니다.

축제는 그 도시의 성격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종합문화예술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대전의 특색을 갖춘 대표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여의 준비 끝에 대전의 대표축제로 내놓은 H₂O축제는 사실상 실패작이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과 어울리면서 축제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직접 육성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많은 축제도 대전축제의 연계선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년만 해도 동구의 ‘대전역 0시 축제’, 서구의 ‘수상뮤지컬 갑천’ 이 새로운 축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축제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외래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을 했고 또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전해 주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축제를 남발하고, 자원부족을 이유로 시에 재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축제를 평가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의 시티투어는 초기에 이용객이 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만성적자에 시민에게도 외면당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티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해당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위탁업체에 의존하면서 관리감독은 소홀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형식적인 운영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땀질식의 처방이 아닌 전문 컨설팅이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티투어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에서 대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의 시작이자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9개의 사업 외에도 충남 15, 충북 43개, 대전 18개의 자체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충남은 ‘대백제전’이, 충북은 ‘국제한방엑스포’라는 대형 행사까지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벤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 면에서 충남의 28억 원, 충북의 25억 원에 비해 뚜렷이 비교되는 10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담당공무원을 증가시키고 준비위원회까지 조직한 충남, 충북의 움직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 충북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전은 그 존재감마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계기로 대전 관광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관광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타지자체의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문화와 관광, 지역브랜드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여기신다면 이러한 교육과정도 빨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관광을 다루고 있다거나 지방공사까지 설립하고 있는 타자치단체까지는 못 쫓아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인력으로 관광을 담당하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뉴 그린 파크’와 ‘성북동 종합관광 레저스포츠단지’사업이 완성된다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필요한데 단지 대전도시공사에만 맡기기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대전도시공사가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담당하면서 점차 주 업무가 변질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조직도 점차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다변화를 위해선 바람직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향후 전개될 문화관광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다소 벽찰 수 있으리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천이나 경기, 강원, 제주 등이 별도의 전문 공기업으로 독립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청산과 연계하여 관광, 컨벤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공기업의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대전은 문화 불모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나, 민선4기 들어 이러한 이미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전이 관광취약지라는 이미지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學元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으로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議長 金學元 그러면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겠습니다.

박성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城市長 朴城孝 이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대한 관광활성화나 컨벤션산업 이런 데 대한 폭넓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상당히 좋은 제안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산업이 앞으로 도시에서 해야 될 중점사업임에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중에 이미지가 과거에는 과학도시, 교통도시, 국방도시였지만 이제는 녹색성장도시, 문화도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는 도시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복합적인 내용의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총체적으로 매력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는 도시가 살기좋은 도시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슈퍼브랜드 네임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분야별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이고요.

총체적으로 우리 도시는 살기좋은 도시라는 개념 아래서 어쨌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두 번째는 창의적인 교육도시, 세 번째는 건강한 최장수도시 이런 것

들을 우리 도시의 목표로 삼는 것이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문제와 도시민의 행복과 질을 높이는 문제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관광을 위해서는 그 도시 내에 있는 관광이 될 만한 인프라를 우선 발굴 육성을 하고, 각종 이벤트를 개발해서 집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서 또 체계적인 인근과 연계관광과 협조성을 강조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나 마인드가 개선돼야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이제는 관광이라고 해서 하나의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지적하고 계신 대로 컨벤션산업을 육성해서 회의나 이벤트를 육성하는 일, 아울러서 또한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얻어진 경험처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국내외 많은 손님이나 국제적인 어떤 경기를 유치해서 지역으로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오는 일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들이 또한 연계성을 갖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망과 관련해서도 우리 인근에 있는 청주공항을 어떻게든지 좀 활성화해서 외국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갖춰가는 일도 저희가 책임져야 될 중점과제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런 많은 것들을 관련해서 관광자원으로서 단계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시다만 나름대로는 그간에 많은 매력요소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전의 명소 일곱 개소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보문산도 뉴 그린 파크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매력포인트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 예로 우리의 계족산이 평범한 산에서 이제는 환경과 관련된 맨발걷기라는 브랜드로 전국적인 명소가 돼가고 이것을 국제화시키는 과정도 이뤄내고 있다는 점도 저희로서는 활용가치가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내용들에 대한 중복은 생략을 하겠지만 아울러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청호 주변을 둘러싼 올레길이라든지 대청호변과 관련된 문화 아니면 쉽터적 개념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취지에 해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또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도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내년 '대충청권방문의 해'와 연관해서 우선 3개 시·도가 연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방문의 해 사업내역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3개 시·도가 합의된 내용으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를 읽는 것은 생략하고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만이 업무의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3개 시·도가 연관성을 갖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시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그런 매력을 창출해내야만 인근 충남·북과 연계되면서 대전을 찾을 수 있는, 그저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찾을 수 있는 매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근과는 차별이 되는, 백제라는 역사성, 충북은 자연 경관이라는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 자체를 매력있는 장소로 만드는 도시 어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도시 특색에 맞는 과학과 관련된 주제로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공간, 아니면 학습할 수 있는 이벤트 또 도시로서의 가질 수 있는 녹색도시라는 개념의 차별화된 전략들로 함께 연관하면서 우리 도시의 특성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근과 G9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은 체계화되고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보강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관련된 시설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숙소 문제가 큼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들을 숙박시켜서 체험시키기 위한 유스호텔과 같은 그런 규모있는 청소년 숙박체험시설도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서 종합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유성이 어떤 테마타운이 되기 위해서 유성시장을 인근으로 한 지역을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룡스파텔을 어떻게든지 온천테마타운화 시켜서 그것이 집객효과를 이룰 수 있고 유성의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숙박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의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실한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하신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컨벤션과 관광과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애로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관광과 관련된 컨벤션, 관광 이런 부분들이 조직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마케팅 공사와 같은 별도의 단체도 필요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AC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유치부터 최종적인 행사 마무리까지 전 코스를 경험해 본 것은 매우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던 우주축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행사의 성격을 훨씬 더 드높였고 저희로서는 실속도 많이 챙긴 행사였다고 자평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필요한 것은 소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 전략과 지식, 체계화된 조직 이런 문제에 공감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외부 전문가로 공무원에서 임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컨벤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계획도 매우 귀한 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의약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경험에 본 바에 의해도 상당히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분야가 의학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집중공략하고 또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일본시장을 통한 해외교포 시장을 연결하는 노력도 좀더 배가함으로써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손님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더 추진되도록 하겠고,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문제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컨벤션센터 옆에 정말로 무역전시관 공간에 다각도의 궁리를 해봤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정된 호텔부지와 바꾸는 문제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좀더 연결성을 갖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체에서는 그것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 또 또다른 민간이 유치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중용해서 우리의 목적과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축제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축제의 남발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서 그것을 종합하고 또 특색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거쳐서 대표적인 축제를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도시라는 특성과 이제는 녹색도시적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특히 갑천이라는 하천이 호수적 기능을 하면서 하천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축제들도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예지만 수능시험을 앞두고 갑천에 유등과 풍등을 날리는 행사를 해봤습니다.

참여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전의 가장 명소다운 명소, 이벤트가 연결되는 공간 이런 것으로 복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로 축제를 지금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동구에서 하는 0시 축제, 또 특별히 가을에 했던 국화꽃 축제 또 서구에서 했던 수상뮤지컬, 또 중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족보와 뿌리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한 축제들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시비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축제를 평가해서 차등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게 수차례, 수년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큰 개선책을 못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IAC나 전국체전을 통해서 외지인이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큰 성장을 거두었습니다만, 이것이 지속화되기는 어렵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시티투어 방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의견에 의하면 버스 자체도 이층버스처럼 독특한 버스를 구입해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별로 흥미있는 코스를 다시 개발하는 그리고 체험과정을 포함해서 넣는 이런 다양한 공리를 통해서 시티투어 자체도 지역을 알리면서 지역경제를 다소 일으킬 수 있는 복합적인 목표로 쓰도록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애정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치 검토와 관련된 부분을 바로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남문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인력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일단은 건립되기 전에도 그 인력을 준다고 해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물론 준공이 되기 전에, 사전에 운영과 관련된 인력을 검토해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마케팅공사도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서 지금 도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업무나 시설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종합 스크랩 해본 다음에 그 설립 가능성 여부도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정말로 조목조목 우리 시가 가장 약했던 그런 분야에 대한 많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심껏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제안된 사안이 실용된 내용과 개선된 사안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李貞姬 議員 의원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집행한 각종 사업들이 적법하고 효율성있게 추진되었는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후속 조치가 일부 미흡한 실정으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거나 대안제시 등 개선이 요구된 사항은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그리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심준홍, 광영교) 및 보임(전병배, 박희진)의 건

(15시 38분)

○議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님과 곽영교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위원 사임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사임 처리는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이 위원장 사임 규정의 예에 따라 회기중에는 본회의의 동의로,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표명하신 심준홍 위원님과 곽영교 위원님의 사임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심준홍 위원님과 곽영교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병배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배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6시 00분)

○議長 金學元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 | | | |
|-----|-----|-----|-----|
| 김남욱 | 오영세 | 양승근 | 김영관 |
| 전병배 | 김태훈 | 김재경 | 곽영교 |
| 김학원 | 조신형 | 오정섭 | 송재용 |
| 이상태 | 박희진 | 박수범 | 심준홍 |
| 이정희 | 김인식 | 권형래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
|-----------|-----|
| 대전광역시장 | 박성호 |
| 행정부시장 | 김홍갑 |
| 정무부시장 | 송인동 |
| 기획관리실장 | 류순현 |
| 경제과학국장 | 이택구 |
| 자치행정국장 | 정하윤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장시성 |
| 복지여성국장 | 조정래 |
| 환경녹지국장 | 윤태희 |
| 교통건설국장 | 김권식 |
| 도시주택국장 | 박월훈 |
| 공기업경영혁신단장 | 강홍철 |
| 소방본부장 | 박호선 |
| 인재개발원장 | 손성도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준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재욱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낙현 |
| 건설관리본부장 | 서문범 |
| 공보관 | 이중환 |
| 감사관 | 조규상 |
| 정책기획관 | 김기황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
|--------|-----|
| 교육감 | 김신호 |
| 부교육감 | 김명훈 |
| 교육국장 | 양병욱 |
| 기획관리국장 | 박종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 사임 위원 명단

심준홍(한나라당)

곽영교(한나라당)

· 보임 위원 명단

전병배(한나라당)

박희진(한나라당)